

6월 녹조 우려 4대강 보 절반 상시개방

여름철 녹조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4대강 보(坝) 절반가량을 연중 상시 개방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여름철 녹조 대응 및 관리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 총리는 이날 "이미 낙동강과 한강 일부에 녹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응을 당부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달 셋째 기준 낙동강·한강수계에선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소량 출현했다. 조류경보제 대상 28곳중 잡살수중보, 한강친수구간(이상 한강 수계), 안계호 사연호, 낙동강 분류, 칠곡, 강정 고령, 창녕 함안(이상 낙동강 수계) 등 7곳이 여기에 해당한다.

게다가 기상청은 23일 장기예보를 통해 "올 여름은 덥고 강수량이 적어 이르면 다음달초에서 중순께 녹조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예보한바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상시개방하고 있는 8개보 가운데 금강(세종·공주보)과 영산강(승촌·죽산보)의 4개 보는 현 상태를 유지해 여름철 녹조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나머지 낙동강(강정고령·달성·합천창녕·창녕함안보) 4개 보는 현 수위수준에서 상시개방을 유지하면서 농업용수 수요 감소기에 개방수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녹조가 대량발생하면 상류법을 비상방류해 체류시간을 줄이고 조류와 오염물질을 씻겨낼 계획이다. 관찰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보 처리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보로 인한 녹조 문제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달부터 9월까지 '하절기 집중저감기간'으로 설정해 녹조 유발 오염물질을 사전에 낮추기로 했다.

녹조발생 우려 인근과 상류에 위치한 공공 하·폐수처리장에 대해서는 6월부터 9월까지 오염물질(총인) 방류기준을 강화하고 5~8월에는 환경부·지자체·환경지킴이 합동 370여명과 드론을 투입하여 방치된 가축분뇨, 퇴비·액비, 하천변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미 방치축분 제로화를 목표로 유역내 축산농가 167곳의 가축분뇨 전량수거 계약은 현재까지 114곳을 수거·처리했다"고 말했다.

실제 오염물질이 흘러들어오는 지류·지천 저감대책도 추진한다.

대청호 수계에서 오염부하가 가장 높은 소옥천(충인부하량의 72%)

'여름철 녹조 대응 및 관리대책' 심의·확정 환경부 "녹조 대량 발생엔 상류댐 비상방류"

에 대해 지난 1월 수립한 '대청호(소옥천) 녹조저감대책'이 대표적이다. 소옥천 대책을 토대로 현재 수계별 핵심 오염지류·지천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지자체와 공동으로 오염원 정밀조사를 거쳐 특별저감 대책을 수립중이다.

녹조 저감대책은 9월까지 수립해 문제가 되는 수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4개소인 녹조 감시 지점을 2배 가까운 87곳으로 늘리고 이른바 '녹조라떼' 제기 수역에 대해선 추가적인 측정·분석을 통해 인식과리를 해소한다.

먹는 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녹조 영향을 받는 정수장 101곳에 대해 이달 말까지 전수 점검하고 수돗물(정수) 내 조류독소 수질검사 결과를 조류경보 발령 즉시 공개해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줄 계획이다. 끝으로 정부 주도 녹조 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4대강 수계 총 82개 단체와 함께 유역살리기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민참여형 녹조 대응에도 나선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녹조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실 수 있도록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먹는물 안전을 철저히 확보하겠다"며 "작은 지류에서부터 지자체·지역주민과 함께 오염을 제거해나가 보다 쾌적한 물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시



젓 먹는 멧비둘기 새끼 24일 경남 가창군 거창읍 근대의료박물관 모과나무 위에 등지른 야생 멧비둘기 새끼 2마리가 마지막으로 어미의 목에 있는 모이주머니 안쪽 벽에서 생성되는 비둘기 젓을 먹고 있다.

불법 게임기 수백대 유통업자 등 15명 구속 기소

광주지검, 9명 불구속기소·도주 2명 지명수배

불법 게임기 수 백대를 전국에 유통한 업자 등이 검찰 수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현)는 불법 게임기 수 백대를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유통 총괄업자 A(47) 씨와 광주 지역 유통 총책 B(51) 씨 등 1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게임장 업자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도주한 2명을 지명수배했다.

A 씨 등은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 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내용과 달리 이른바 연타·예시 기능이 있고, 이용자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IC 카드 등에 저장해 환전할 수 있도록 개·변조된 불법

게임기 900여 대를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프로그래머, 게임물 설치기사, 지역 유통 총책 등으로 철저히 역할을 분담한 뒤 개·변조 게임물을 판매·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이 불법 게임기 유통·운영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19억8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재산을 압류하는 등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다.

실제 한 게임장 업주는 개·변조된 게임기 50대를 운영하면서 하루 최고 870만 원 까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우거나 불법 게임기를 몰래 이동해

재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던 실업주들에 대한 세밀한 수사를 통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게임장 압수수색 과정에 바지사장에 대한 검찰 조사 대비 문건이 발견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도록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 환수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전한 근로의식을 저하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불법 게임기 등 사행성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불법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춘정 기자

올해 태평양 중부에 최대 6개 태풍 예보

미국 해양대기청의 중부태평양 허리케인 센터는 23일(현지시간) 올 해 앞으로 6개월 동안 최소 3개에서 최대 6개의 태풍이 발생할 것으로 예보했다. 또한 태풍들의 활동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좀 더 강하게, 자주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내 놓았다.

예년의 태풍 발생 건수는 3개에서 5개였다. "어쨌든 이 지역 주민들은 모두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사이클론이나 허리케인은 단 한 개만 발생해도 한 지역의 1년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다"고 해양대기청의 코버트 발라드 대변인은 말했다.

올해 예상 기상조건은 적도를 따라 해수 표면 온도가 올라가는 약한 엘니뇨 현상이 지속되면서, 태풍이 오는 계절 동안 이것이 크게 증폭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렇게 되면 이 해역에서 발생하는 태풍의 건수도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현상은 지난 해에도 일어났으며 2016년에는 7개의 이름을 가진 대형 태풍이 있었다. 2015년에는 무려 15개의 신기록을 수립하기도 했다. 엘니뇨 현상은 태풍의 크기와 강도를 결정하는 조건이다.

특히 하와이 제도 부근에서는 최근 몇 달 동안에도 극심한 폭우가 쏟아졌는데 이는 열대성 사이클론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도 부근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미 당국은 밝혔다. 태풍은 보통 6월에서 11월까지가 발생기간이며, 그로부터 몇 달 동안은 언제라도 하와이 해역에 큰 폭우가 내릴 수 있다.

하와이에서는 올해 4월에도 24시간 동안 무려 125 mm의 폭우가 쏟아져서 홍수와 산사태 피해가 발생, 주민들이 집을 버리고 대피하기도 했다. 최근 몇 달동안의 평균 강수량은 지난 30년 만에 내린 폭우 가운데 5위를 기록했을 정도였다.

무기규제국에 권총 밀수출 美 남성 15년형

미국 몬태나주의 법원이 호주, 노르웨이 등 총기규제가 엄격한 나라를 대상으로 고성능 권총을 대량 밀수출한 혐의를 시인한 30대 남성에게 23일(현지시간) 재판에서 15년 형을 선고했다.

에릭 대니얼 도일(37)은 2014년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국외의 구매자들에게 25~35정의 무기를 불법으로 수출했다고 겸시는 말했다. 이 무기들은 미국의 우편서비스(우정국)를 통해서 스웨덴, 덴마크, 영국, 캐나다로도 판매되었다.

몬태나주 캘리스펠에 사는 도일은 자신이 수사 당국에 협조해서 17명을 체포하고 5정의 무기를 압수하게 했으며 더 적은 형량을 요구했지만 허락되지 않았다. 연방법원의 앤드류 벨스 관선변호사는 23일의 선고 이후 도일의 항소시를 밝혔다.

벨스변호사는 "재판부가 도일의 수사 협조의 공은 인정했지만 다른 공범들을 체포하게 해 준 것은 애초에 그들이 매매한 총을 보급한 것이 자신이므로 일종의 순환논리에 따라 감형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 수색 공식 종료

말레이시아 당국이 항공사 최대의 미스터리로 불리는 항공기 MH370 실종 사건에 대한 수색 작업을 다음주에 공식적으로 끝내기로 했다. 2014년 3월 실종 사건 발생 후 약 4년 만이다.

2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앤서니 로크 말레이시아 교통부 장관은 이날 "당초 4월에 끝날 예정이던 수색 작업이 연장된 것"이라며 "오는 29일까지만 수색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MH370은 2014년 3월8일 0시41분에 승객과 승무원 239명을 태우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떠나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던 중 출발 40여 분 만에 통신 두절과 함께 실종됐다.

말레이시아와 호주, 중국이 공동 수색을 벌였으나 인도양 서부 해안지역에서 잔해가 발견된 것을 제외하곤 3년 여 동안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지난해 1월 수색작업을 중단했다.

유가족의 끈질긴 수색 제게 청원 끝에 말레이시아 당국은 기체를 찾지 못하면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미국의 해양 수색 전문업체 오션인퍼니티에 수색을 맡겼으나 오션인퍼니티 역시 기체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이는 지난 9일 총선으로 총리에 오른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신임 총리 내각의 재정지출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모하마드 총리는 나직 라자 전 총리의 방만한 국가재정 운영을 문제 삼았다. 수색이 전면 중단되면서 MH370 실종 사건은 영원한 미제로 남게 됐다.



모두, 안녕하세요?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영양아 건강검진



임 검진



구강 검진

'국가건강검진' 효과 비교

검진종류	발견률	발견률
건강검진	발견률 10%	발견률 10%
건강검진	발견률 42%p 감소	발견률 42%p 감소
건강검진	발견률 18%p 감소	발견률 18%p 감소

*발견되는 건강검진에 참여하거나, 미리 미리 건강 챙기세요.



보건복지부 | 콜센터 129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